

## || 제2회 동형모의고사 민법

### 1.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다.
- ②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④ 매도인의 해제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도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있는 등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매수인이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권 - 지배권
- ②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형성권
- ③ 매매예약의 완결권 - 형성권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 3.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태아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 ④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태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 ⑤ 태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허락의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품주문행위를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④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다라도 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甲은 가정법원에 의해 부재자 乙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 ② 甲이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추인에 의하여 그 매매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 ③ 乙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없이 甲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乙의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甲이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乙의 부동산에 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유효하다.

6.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③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비법인사단의 교회의 구성원이 1인이 된 것은 교회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 ②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8.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상실한다.
-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라도 양도나 상속될 수 없다.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구분이다.
- ②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 ③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다.
- ⑤ 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과와 같은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ㄹ.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성립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할 수도 있다.
- ②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더라도,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이다.
- ③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3. A의 사기로 인하여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설명은?

- ㉠ A가 을의 대리인인 경우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A의 사기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던 경우,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갑은 선의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갑은 A의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 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1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 ④ 표의자는 의사사표시를 발신한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⑤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1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 ② 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17.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이다.
- ②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2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 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⑤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8.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여부의 응답을 최고할 수 없다.
- ②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 ③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19.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그 후 丙은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②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난 경우, 丙은 乙에게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③ 甲이 丁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추인 사실을 알게 된 丙은 乙에게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⑤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이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乙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③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 ④ 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 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21.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자전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의 법정대리인 병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병이 을에게 자전거를 인도한 경우
- ② 병이 을에게 자전거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
- 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지난 경우
- ④ 갑이 병의 동의를 받고 추인한 경우
- ⑤ 을이 병에게 자전거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22.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 ④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은 해제조건이다.
- ⑤ 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23.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 ②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
-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③ 연대채무자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가압류를 하면, 권리자가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25.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공용징수를 위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명의로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④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2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7.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 ②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소유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 ⑤ 소유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②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 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⑤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31. 저당권과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저당권과 질권 모두 그 설정에 있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인도는 요구되지 않는다.
- ㄴ. 저당권과 질권 모두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ㄷ. 저당권과 달리 질권은 담보물의 보존비용이나 담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한다.
- ㄹ. 저당권과 달리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서는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33.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②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③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
-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해지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역을 한 때에는 이자, 비용,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35.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
-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와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
- ㉢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 ㉣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

- ① ㉠                      ② ㉡, ㉢                      ③ ㉢                      ④ ㉣                      ⑤ ㉢, ㉣

36. 甲은 2020.2.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의 편지가 2020.2.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甲은 위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 ② 甲의 편지가 2020.2.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 甲이 사망하더라도 위 청약은 유효하다.
- ③ 乙이 위 중고자동차를 9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면 乙은 甲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 ④ 甲의 편지를 2020.2.5. 乙이 수령하였다더라도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위 청약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2.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2.15.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2.15. 이다.

37.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②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 ⑤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게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8. 乙이 甲 소유의 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
- ② 甲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임대차계약 존속 중 주택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 乙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원인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乙이 주택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에 甲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 ②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유상위임의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의무자는 과실 있는 감독의무위반과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초래한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그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 제1회 동형모의고사 해설

### 1. 정답 ③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2007.1.16. 2005다71659).

### 2. 정답 ⑤

해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 3. 정답 ①

해설)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될 뿐,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대판 1982.2.9. 81다534 참조.

### 4. 정답 ②

해설) ① 틀린다. 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17조 참조. ② 옳다. 제8조 제2항 참조. ③ 틀린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3년 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6조 참조. ④ 틀린다.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다라면 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제1항 참조. ⑤ 틀린다.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 참조.

### 5. 정답 ⑤

해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었다라도 부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채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채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 볼 수 없다. 대결1976.12.21. 75마551 참조.

### 6. 정답 ④

해설)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판례).

### 7. 정답 ②

해설) ① 틀린다.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한다. 제77조 제2항 참조. ② 옳다. ③ 틀린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④ 틀린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완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2조 참조. ⑤ 틀린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82조 참조.

### 8. 정답 ①

해설) ① 옳다. 대판2005.9.15. 2004다44971 참조. ② 틀린다. 총유로 한다. 제275조 ㄱ1항 참조. ③ 틀린다.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비로소 소멸한다. ④ 틀린다. 포괄적인 책임권은 인정되지 않고,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참조. ⑤ 틀린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 양도나 상속될 수 있다.

9. 정답 ②

해설) 증물은 주물과는 다른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제100조 제1항 참조.

10. 정답 ①

해설)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대가의 대소불문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판).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제103조 위반이 아니다(대판).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제103조 위반이 아니다(대판). ㄹ.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은 제103조 위반이 아니다(대판).

11. 정답 ②

해설)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판2010.7.15. 2009다50308 참조.

12. 정답 ⑤

해설)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대판1992.5.22. 92다2295 참조.

13. 정답 ①

해설) ㉠ 옳다.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법적으로 본인 자신의 사기·강박에 해당하므로 A가 을의 대리인인 경우 갑은 을의 선약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제110조 제2항 참조. ㉢ 틀린다. 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제3항 참조. ㉣ 틀린다. 갑은 A의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46조 참조.

14. 정답 ②

해설) ① 틀린다.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판2000.5.12. 2000다12259 참조. ② 옳다. ③ 틀린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대판1955.11.10. 4288민상321 참조. ④ 틀린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대판2005.5.12. 2005다6228 참조. ⑤ 틀린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2006.12.7. 2006다41457 참조.

15. 정답 ②

해설) ① 틀린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표백단계). ② 옳다. 제111조 제2항 참조. ③ 틀린다.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④ 틀린다. 표의자는 의사사표시를 발신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⑤ 틀린다.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제112조 후문 참조.

16. 정답 ⑤

해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판1996.8.23. 94다38199 참조.

17. 정답 ③

해설) ① 틀린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틀린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0조 참조. ③ 옳다. 대판1998.5.29. 97다55317 참조. ④ 틀린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의 과실책임만 진다. 제122조 단서 참조. ⑤ 틀린다.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18. 정답 ④

해설) ① 틀린다. 추인여부의 최고는 약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된다. 제131조 참조. ② 틀린다. 본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③ 틀린다.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제134조 참조. ④ 옳다. 제135조 참조. ⑤ 틀린다.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이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판1994.9.27. 94다20617).

19. 정답 ③

해설) 본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丁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판례).

20. 정답 ②

해설) ① 틀린다.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39조 참조. ② 옳다. 제142조 참조. ③ 틀린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46조 참조. ④ 틀린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대판1994.6.24. 94다10900 참조. ⑤ 틀린다.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제141조 단서 참조.

21. 정답 ⑤

해설) ⑤의 경우 상대방 을이 병에게 자전거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이 되지 못하므로 여전히 병이 취소할 수 있다. ③의 경우에는 이미 취소권이 소멸하였고(제146조), 나머지 지문의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어 취소하지 못한다.

22. 정답 ④

해설) ① 틀린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7조 제1항 참조. ② 틀린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9조 참조. ③ 틀린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대판1996.5.14. 96다5506 참조. ④ 옳다. 대판1983.8.23. 83다카552 참조. ⑤ 틀린다. 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151조 제1항 참조.

23. 정답 ②

해설)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4. 정답 ⑤

해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가압류를 하면, 응소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대판2010.8.26. 2008다42423).

25. 정답 ⑤

해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

26. 정답 ③

해설) 을이 갑 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1988.5.10. 87다카1979 참조.

27. 정답 ④

해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4조 제2항 참조.

28. 정답 ⑤

해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판1995.7.11. 94다4509 참조.

29. 정답 ④

해설)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0. 정답 ③

해설)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1. 정답 ②

해설) ㄱ. 질권의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제330조). ㄴ. 옳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불가분성에 관한 내용이다. ㄷ. 옳다. 제334조, 제360조 참조. ㄹ. 저당권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제370조, 제342조).

32. 정답 ②

해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33. 정답 ⑤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해지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34. 정답 ⑤

해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총당하여야 한다. 제479조 제1항 참조.  
① 제462조. ② 제467조 제1항. ③ 제469조 제2항. ④ 제470조.

35. 정답 ④

해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36. 정답 ⑤

해설)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2.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2.15.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간의 계약의 성립일은 2020.2.10.이다(제531조).

37. 정답 ③

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약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574조.

38. 정답 ②

해설) 임대인 甲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차인 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판례).

39. 정답 ④

해설) ① 틀린다. 불요식계약이다. ② 틀린다.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제681조 참조. ③ 틀린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해석된다(대판). ④ 옳다. 제689조 참조. ⑤ 틀린다.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1994.2.22. 93다4472).

40. 정답 ④

해설)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공작물책임은 성립한다. 다만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상계하여야 한다(대판).